

■ 정부의 불법 체류 외국인 일제 단속이 시작 단계부터 흔들리고 있다. 중소기업 주들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이탈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인력 부족과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추방 위기에 내몰린 중국 동포들은 집단적 국적 회복 신청과 단식 농성으로 맞섰다.

거센 저항에 직면한 정부는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단속을 '당분간' 유예하고, 국적 회복과 관련한 법률 분쟁이 정리될 때까지 중국 동포 불법 체류자의 단속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소지자, 유류·서비스업 종사자, 비제조업에 취업중인 4년 이상 불법 체류자 순으로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은 중소기업체에 나타나기보다는 여전히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중소기업체에 그들을 마음 놓고 고용하지 못한다. 임정 단속을 강조하던 정부가 급작스레 내놓은 조치이니 그렇다. 중국 동포도 사업체를 옮긴 노동자들은 단속 대상에 들기 때문에 불안해하기는 마찬가지다. 결국, '한시적으로' 취해진 정부의 임시방편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농성중인 중국 동포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데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포럼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

원칙 무너진 불법체류자 단속

임시방편 조치는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을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짙다. 숨어 있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일제 단속 기간이 끝나면 전처럼 마음 놓고 취업할 수 있는 상황이 다시 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들은 내년 봄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에는 불법 체류자와 그 고용업체 단속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숨어 지내려 한다. 그들은 이러한 임시방편 조치에서 과거 16차례 숨방망이 단속 경험을 떠올리며 새로운 기대를 걸고 있다.

임시방편 대응은 '은신' 부추겨

그러나 불법 체류자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리되어야 한다. 기존 불법 체류자를 없애지 않은 채,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면 그들 역시 불법 체류자로 잔류할 가능성이 짙기 때문이다.

불법 체류자 해소 방안은 단속에 의한 강제추방보다는 자발적으로 출국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상책(上策)이다. 그것도 일관된 정책 의지가 뒷받침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자발적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유인(誘因)과 강제(強制)를 모두 동원하되, 편법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운영해야 한다.

첫째, 유인을 제공하려면, '한시적 단속 유예'와 같은 어정쩡한 형태가 아니라 '일정 기간 취업을 허용하고 귀국 약속을 받는다' 명확한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작년, 불법 체류자들에게 이미 1년 반의 국내 체류를 허용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 기간을 '강제 출국 기한'의 무원칙한 연장으로 받아 들였을 뿐, 자신들의 출국 준비와 연계하여 생각지 않았다. 이러한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또한, 중국 동포들에게도 불법 체류

단속을 당분간 유예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해 방문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방문통거'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재외동포는 고용허가제(취업관리제)에 의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뒤, 그들의 자발적 귀국을 유도해야 한다. 자진 신고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귀국할 경우 정부는 '불법 체류 범칙금'을 면제해 주고 있으나, 자진 신고 기간중 출국자와 차등을 두기 위해 '재입국 금지' 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이 늦게 출국한 사유가 합당한 경우, 그 조치를 과감히 해제하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자발적 출국 유인책 바람직

둘째, 유인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엄격한 단속을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내 사업체가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지 못하게 정부는 지속적인 단속을 펴야 한다. 외국인인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만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고, 불법 체류자는 일 자리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불법 체류자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한국에서 아무리 오래 버티더라도 일 자리를 구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돼야만 불법 체류자들이 제 발로 출국할 것이다.